

코로나19 극복 '모범' 새로운 도시모델 조성

대한민국 리더도시로 '우뚛'

사회적 연대 · 자유로운 상상력 '결실 맺다'

전주가 대한민국 리더도시로 우뚛 서고 있다.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끈끈한 사회적 연대와 '함께' 라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발 앞선 대응을 통해 위기극복 모범도시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전주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모범도시

전주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첫발을 댄 착한 임대운동은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선 운동이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됐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시는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들의 재산세의 감면했다.

재난기본소득도 전주에서 최초로 지급됐다. 시는 소득 절벽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을 지급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 이렇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것은 물론 소비 회복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이후 경기도와 경남도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이은 것은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이었다.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막는 게 목적이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물론이고 요식업과 의료업계 등 소규모 사업장까지 동참한 상생사업체 들은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교통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 시는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경영안정자금 이차지원 등으로 고용안정을 뒷받쳤다.

이와 함께 시는 소득에 필요한 약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소득장비도 무상으로 빌려주는 착한 소득운동을 전개했다. 또 전주지역 지역업자와 소상공인 800여개소가 참여한 대규모 합동행사를 진행하는 '전주착한캠페인'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운동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온 전주시를 극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주 방역이 전국 모범'이라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역학조사도 모범적이었다. 시의 역학조사 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세 차례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 전주 상생선언 퍼포먼스.

우수사례로 언급됐다. 시는 광복절 연휴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역학조사반을 확대하고 보건소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집중한 것이 큰 모델로 부각됐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

전주는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정부가 한옥마을을 포함해 전주 전역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 잠재력 등을 우수하게 평가한 결과였다. 시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비 5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투입해 전주를 대한민국 대표 한문화 관광거점도시,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 시범도시'로도 선정됐다. 이로써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가 구축됐다. 대한민국 1호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고, 송천동에는 제1호 수소충전소 문을 열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 시내버스 50대와 수소 승용차 8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총 4곳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수소저장용기 기술개발, 한옥마을 수소충전소 구축, 한옥마을 내 셔틀버스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을 이끈다. 지난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이다. 시는 수소와 탄소산업이 맞물려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노인들이 복지시설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에도 주력했다. 의료인과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중심으로 주거, 돌봄, 영양, 문화, 여가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다움으로 혁신하는 도시

시는 올해 시민과 등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챙기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전통보조기기 보험사업에 가입했고, 역시 전국 최초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들을 돕기 위한 재활센터 문을 열었다.

시는 시민 중심의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힘썼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트윈세대(12~16) 전용공간인 '우주로1216'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전주시립 로비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가도도서관으로 변신했다. 학산 숲 속 시(詩) 전문도서관, 첫마중 도서관, 이종호수 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이 속속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혁신도 멈추지 않았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횡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시내버스 정기권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것이 대표적이다. 시내버스 정기권은 침체된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다. 대중교통이 달지 않는 교통오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바로운' 시범도 걸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올해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과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회적 연대를 토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상상력과 용기,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딜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문 대통령이 극찬한 시 코로나19 극복 사례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첫발 댄 착한임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재난기본소득도 최초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큰 도움' 경남·경기도 등으로 퍼져 대량해고 사태 막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민주 최고위원회로부터 '방역 모범' 박수갈채도 받아

수소·관광·탄소 등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다

올 초 문체부로부터 지역관광거점으로 선정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 시범도시로도 선정돼 수소 시내버스 운행 시작 송천동 일원에 충전소 구축 탄소융합기술원, 산업부로부터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 1.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2. 해고 없는 도시 상생 협약
3. 국가관광거점도시 선정 발표
4. 전주송천수소충전소 준공식
5. 전주형 통합돌봄 출범식
6. 우주로 1216



▶ 김승수 시장에게 듣는다

“전주·전북 운명 바꿀 수 있도록 큰 물길 낼 것”

김승수 전주시장은 “모두들 전주가 합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됐고,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낸 도시로 인정받으면서 전주라는 도시 브랜드가 물라보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광역시가 없었던 전라북도나 전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없었다”면서 “광주가 1986년에 광역시가 됐는데, 그 당시 2배 차이였던 광주와 전주의 예산이 지금은 20배 차이까지 벌어졌다”면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전주와 전북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 등 도시 브랜드 물라보게 높아져 광주와 전주 격차 해소 지역 운명 결정하는 관건 새로운 물길 뚫어야”

그러면서 “뚝이 마를 때 어떤 마을은 양동으로 물을 뜨러 다니고 어떤 마을은 아예 물길을 낸다”면서 “전주와 전북은 새로운 물길을 뚫어야 하는 마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시장은 “전주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착한 임대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등 전주발 위기 극복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지력을 보였다”고 말하고 “빛나는 상상력과 용기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주와 전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거대한 물길을 내겠다”고 말했다.

